



[경제종합]
LG유플러스
부산 '5G 스마트항만'
가보니
03



→ 코스피 3147.86 (0.00) → 코스닥 983.45 (0.00)

↑ 금리 (국고채 3년) 1.141 (+0.020) ↑ 환율 (원·달러) 1112.30 (+4.10) (4.30)

JY 중심 지배력 굳힌 삼성 남은 과제는 '보험업법' 대응

<일명 삼성생명법>

삼성家 유산상속 원만히 마무리
이건희 주식 법정 비율대로 분배
이재용, 생명·물산지분 대거 확보
보험업법 따른 지배구조 개편 변수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이 가족들에 공평하게 분배됐다. 가족간 분란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지배력을 강화하는 '신의 한수'라는 평가다. 다만 보험업법 개정 등 규제안이 추진중인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았다는 분석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총수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SDS 등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나눴다. 흥리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분의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9분의 2씩이다.

대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10.38%를 받았다. 흥 전 관장은 지분을 받지 않았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이 나머지 절반을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눴다.

이같은 결정으로 삼성은 형제간 경영권 갈등이나 분할 등 우려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십수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도 나눠 낼 수 있어 당장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도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경영 지배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삼성의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17.97%로 늘렸고, 중간 지주사격인 삼성생명 지분을 대거 확보하면서

10.44%로 삼성물산(19.34%)에 이은 2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3%로 4대주주에 불과하다. 다만 1~2대 주주인 삼성생명(8.51%)과 삼성물산(5.01%)이 이재용 부회장 우호 지분인데다가, 흥리희 전 관장이 2.30%로 3대 주주에 올랐다.

이건희 회장 대신 흥 전 관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3남매가 배당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과 채권을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자산 종액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7% 가까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도 흔들

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간적 여유는 있다. 유예 기간이 7년이라서 올해 통과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편에 나서진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지배 구조를 유지할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에 우려 목소리가 커진다.

일단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을 사오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 경우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되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20%지만, '공정경제3법'에 따라 내년부터 30%로 상향 조정됐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에 더해 18% 가량 지분을 추가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20%지만, '공정경제3법'에 따라 내년부터 30%로 상향 조정됐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에 더해 18% 가량 지분을 추가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20%지만, '공정경제3법'에 따라 내년부터 30%로 상향 조정됐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실업률 최악... 코로나보다 추세적 상승 영향

지난해 연평균 실업률 4.0%
2001년 이후 연간 기준 최고
고용없는 성장에 코로나 겹쳐

우리나라 실업률이 지난 2001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까지 겹친 탓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실업률은 4.0%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2001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높은 실업률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도 있지만 2005년 이후 이어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고용분석팀 김병국 차장은 "2020년 평균 실업률 4.0% 중 추세 부분이 3.9%"라며 "과거 고실업률 시기인 2005년 및 2010년의 추세 실업률 대비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높

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기와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높아졌다. 실업으로의 유입 전환율이 하락했지만 취업으로의 유입 전환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기보다는 새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계속 줄었던 얘기다.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와 제조업 자동화, 노동집약 부문의 해외 이전, 정부의 직접 고용정책 강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실업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2일 신규확진 606명, 4일째 600명대
… 국내발생 585명 /사진 뉴시스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339만5104명… 사망 신고 4건

▲ 北김여정 "상승행동" 위협… 한미회담 앞두고 고심 깊은文
▲ 임대차법 9개월, 전세값 20% 급등… "안정세 판단 이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휴일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정부는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직계가족 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뉴스

'노쇼 백신'에 몰리는 사람들 국가 예방접종계획 혼선 우려

AZ백신 접종 기피자 늘자
노쇼 물량 문의전화도 폭증
의료기관 "지침없어 혼란"

#서초동에 사는 고 모씨(53)는 지난 달 30일 뜻하지 않게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정기적으로 만성질환 약을 타려고 들르는 병원에서 접종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 남은 백신 물량, 일명 '노쇼(no show) 백신'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고 씨는 "운이 좋았다"며 "주변에 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백신을 찾아 맞으라고 권하고 있다"고 했다.

'노쇼 백신'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정부가 4월 29일부터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접종자가 불참해 남은 물량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백신을 선점하기 위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것.

AZ 백신 접종 기피자가 많아지면서, 노쇼 백신 수요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나이와 직업군으로 대상을 선별해 순차 접종을 진행중이던 국가 예방접종 계획이 무의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쇼 백신 문의 폭주

2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관에 따르면 지난 주부터 노쇼 물량 문의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사이트검색을 통해 접종이 가능한 서울 병

원들에 문의를 한 결과, 그 날 당장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한 병원은 "오후 2시에 최소 물량이나와서 원하면 바로 예약할 수 있다"며 "대기자 신청은 어제 마감됐고, 매일 오전 전화주시면 그 날 최소 물량이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접종자가 불참해 생긴 '노쇼 백신'을 대리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돌아와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노쇼 백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서울 강남구 병원의 경우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대기 명단은 이미 꽉 찬 상태"라며 "노쇼 물량이 나오면 전화를 드려서 접종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전화가 폭주하며 의료기관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은 "문의 전화도 전화지만, 자주 오시는 환자분들이 먼저 맞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정신이 없다"며 "접종자를 우리가 고를 수도 없고 남은 백신을 폐기할 수도 있는데,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바이든, 아시아 유산의 달 선포… "인종 차별과 맞설 것"
▲ 과기장관 후보자 이중국적 두 딸 의료비 혜택… "자격기준 충족해 받은 것"